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I.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Green Growth Strategy Synthesis Report)” 초안에 관한 워크숍
- 회의기간 및 장소
 - 기간: 2011년 2월10일 ~2월 11일
 - 장소: OECD 본부 대회의실
- 회의참석자:
 - 국내 대표단

성명(영문)	소속 및 직급	담당 세션
노희진 (Noh Hee Jin)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conomic Instruments
김윤형 (Kim Yoon Hyung)	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원)	Food & Agriculture
정지원 (Jeong Ji Weon)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Jobs & Skills
정기철 (Jeong Gi Cheol)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nnovation
이명균 (Lee Myung Kyoong)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교수)	Development
김호석 (Kim Ho Seok)	환경정책평가원 (연구원)	Indicators
이형우 (Lee Hyung Woo)	녹색위 (사무관)	총괄
박흥경 (Park Heung Kyeong)	외교부 (환경심의관)	총괄
정태용 (Jung Tae Yong)	GGGI (부소장)	GGGI

-국외 참석자:OECD 회원국 · 인니 등 개도국 ·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등 약 400명

II. 주요 회의결과

1. 전체 회의(1일차 Plenary Session)

- GGS 보고서 관련, Pier Carlo Pardoan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은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GGS 보고서는 녹색성장 정책 권고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적시하였다고 설명. 다만, 각국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국내 사정에 맞게 적용(translate)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의미(Working definition)를 규정하였으며, 정부는 단계적인 정책 layer 및 장기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 녹색성장은 성장 친화적인(friendly growth) 정책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예산 분배 및 규제 운용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은 skill job을 창출하므로 중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정책임.
- 한편, 참가자들은 GGS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만, 사무국측은 개별 질문에 대한 구체 답변은 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으로 대신함)
-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 중요하며 이러한 참여가 혁신을 가져올 것임. 다만, brown industry의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자유 무역을 통해 극복하여야 할 것임
- GGS는 녹색성장의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 분석이 미흡한데,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극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즉 장기적인 긍정 효과를 통해

어떻게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가 미흡함

- Working definition에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개념 정의가 녹색성장의 starting point일 것이며, 고용 시장에서 Green Job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label화 할 필요가 있음. 한편,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는 더욱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구조적인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구조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예를 들면 public health) 정치적 판단(political judgement)에 대한 risk 관리도 이에 포함 되어야함. 이러한 점에서 (구조적 위험 관리인) 자연자산에 대한 정당한 가격 평가가 중요하므로 natural asset을 어떻게 GG에 들여오느냐가 관건임

- 녹색성장 관련 주요 지표(headline indicator)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 한편, Green Growth에서 Growth를 강조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경제에 반하므로 매우 위험한 정의이며 민간 부분은 아직 Green Growth가 준비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음

2. 세션별 상세 내용

가. Economic Instrument :

-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산(natural assets)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한데,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에는 성장을 위한 비용과 기회 (adjustment cost와 opportunities)가 고려될 것임

- 장기적으로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무시하면 경제성장과 wellbeing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수단선택(instrument selection)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임(minimize the costs and maximize the benefits)

- OECD는 “녹색성장은 자연자산의 질과 양에 대한 지속가능하지 못할 압력을 회피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압력에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변화 등이 포함됨)

- 녹색성장을 추진하기위해 경제적 결정에 있어 자연자산을 정확히 가치평가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장 창출을 통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자연자산의 고갈로 생기는 미래성장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적응비용(adjustment cost)를 최소화함

- 자연자본을 고려하는 녹색성장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이익이 모두 발생함

- 이익으로는 환경자산의 더 생산적인 사용으로부터 오는 이득, 환경충격의 감소, 자원효율성측정의 향상, 향상된 가격결정을 반영하는 기술로부터의 이득,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spillover)등임

- 손실로는 적응비용과 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페널티, 에너지 집약산업과 자원 집약산업에 대한 비용증가등이 있음

- 경제적 환경적 목적은 주요 목적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으나 환경시장 실패는 양자간에 또한 trade-off가 있음을 뜻함

- 경제 정책으로는 건전한 거시 경제정책, 경쟁,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세금과 금융시스템 모두가 녹색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본 세션은 자연자산

의 관리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 있어 정확한 수단의 조합을 선정하는데 초점이 있음

- 정부는 시장실패(자연환경의 공공공재 성격, 외부 효과, 환경 R&D 사업투자의 회수 어려움, 최적결정을 위한 환경정보의 부재 등)가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여야 함.

- 상이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이한 규제 수단이 적절함

- 수단으로는 총량거래제, 환경세, 환경의 proxy에 대한 세, 보조금, 실적기준, 기술기준, 자발적 접근등이 있음

- 비시장 수단 (Non-market instrument)으로는 정보기반 수단과 자발적 수단이나 협약이 있음

- 평가나 에코라벨링과 같은 정보기반 수단은 제품의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 부족시 다른 환경 정책을 유용하게 보완할 수 있음

- 자발적 수단이나 협약은 감축비용이나 환경훼손에 관한 정보밝히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우려나 미래 규제로부터의 기업의 환경 성과 달성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많은 환경의 도전은 수단의 조합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

- 시장의 불완전성과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슈이며, 정보에 기반한 수단은 가격신호를 강화하는데 유용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음

- 다양한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의 조합, 거래가능 상품 허용(tradable

permits), 실적기준치 등이 사용이 최적일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하여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투자와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고, 환경 성과와 성장의 개선에 기여 함

- 예를 들어, 교토 프로토콜 이후 풍력 등에 관한 특허권이 증가

- 녹색성장 정책 디자인에 대한 원칙이 제시됨

- 단순한 규제들을 통한 정책의 확실성 제공되어야 하고, 정책수단의 올바른 조합 선정되어야 함

- R&D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국제간 협력이 필요

- 본 세션의 논의의 초점은 좋은 수단 선정의 실패, 수단선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장에 대한 영향, 성공적 수단 선정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적 협력 등임. 많은 참여자들이 소득세와 에너지세의 세제 개편을 통한 환경정책을 언급함

- 이중과세를 반대하고, 세금체계의 변화는 인간의 소비행동을 변화시킴. 아울러, 보조금을 통한 환경기술개발은 필요하나 보조금 지원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 필요

나. Job & Skills :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

- 한국

-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전략 추진상황(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녹색성장 전략,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등)

-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훈련전달체계, 녹색인력 양성, 대-

중소기업간 훈련컨소시엄, 한기대 및 폴리텍 대학 인력양성체계, 재직근로자 녹색기술 향상훈련, 실업자 직업훈련제도, 녹색사회적 기업 지원, 고용정책 인프라 확충 등)

○ 오스트리아

- 녹색성장 전환과정과 노동시장 정책, 전환센터(Transition Center)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OECD (녹색성장과 정책적 메시지)

-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노동생산성 증감, 실질소득 증감 등), 노동(임금)유연성, 국가별 규제 및 세제, 노동시장 정책패키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정책방향 논의: 내부 또는 외부 노동시장 측면 분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이동(브라운잡과 그린잡)

○ EC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일반론)

- 녹색성장 전환에 따라 노동시장내 일자리 이동(브라운잡과 그린잡), 노동유연성에 따른 구조변화, 녹색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려(특히 녹색일자리 기술부족에 적극 대처)

(참석자 토론내용)

○ 우리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

-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다수국가에서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 추진과 녹색직업훈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

- 특히, 녹색일자리 알선(Worknet),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대책, 녹색사회적 기업 지원내용에 대한 관심과 질문

* ILO측에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된 ILO 회의에서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추가 발표 및 토론참여를 요청

- 반면, OECD 노동자그룹(TUAC)에서는 우리 정부의 녹색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녹색성장 전략 발표이후 관심 및 투자 저하 우려(저탄소, 낮은투자 등)

○ 녹색성장이 전체 일자리 증가를 가져오는지?

- 녹색일자리 및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정의 정립 어려움 논의

- OECD 보고서 내용(“녹색성장 전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체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 노동생산성 저하, 그린잡과 브라운잡간의 고용대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의견 제시

- 미국,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 증대에 따라 일자리가 순증하고 있다는 의견 제시, 다만 이 경우에도 녹색기술 습득 부족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문제시

- 녹색성장 전환과 고용구조 변화는 시장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전체규모 외에도 산업별 고용변화 등이 혼재

○ 녹색성장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변화는?

- 대다수 국가들이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이 혼재된다고 예측하면서,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Policy Mix)이 요구된다고 지적

- 시장적 측면에서 노동유연성 증대, 규제완화, 세제정책 등이 제시, 사회보호 측면에서 안전망 강화, 일자리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강화, 일자리 질 증대, 사회적 협력체제 등 제시
-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생애에 걸친 일반훈련 외에도 산업 및 일자리 구조변화에 따른 기술이전 훈련이 병행될 것을 제안
- 노동시장 정책 추진에 있어 단기 및 중장기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사양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고려 필요
- * OECD는 세션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수정을 약속하면서도, 녹색성장 전환과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적 접근 필요함을 강조

다. 농업 & 식량:

- Headline indicator 중 nutrient balance가 녹색 성장의 지표로서 적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Indicator 부문에서는 양분수지 지표는 단순히 농업 생산에 투입 및 소비된 비료량을 파악하는 것이지 녹색성장을 적절히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음. 비료 사용량이 지역별로 다른 차이가 큰 경우 국가 평균 개념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음.(미국)
- 지표는 전반적인 경제의 녹색화를 측정해야되며 농업 분야만 다루는 것은 균형적인 접근 방법이 아님. 양분 수지 지표는 농업 분야에 투입된 질소 등만을 고려하며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자원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며 성장과의 연계도 불투명함.(일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특히 일본의 경우 향후 자원을 고려한 resource productivity가 headline indicator가 되길 제안함.

- 종합 보고서에 식품 및 농업 부문이 균형있게 기술되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종합 보고서에 농업 분야가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함. (농업부분은 harmful subsidy · 생물다양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종합 보고서 paragraph 169에 기타 오염 발생 부문에 농업과 산림 부문이 포함되었는데 농업과 산림이 오염 발생 부문이라고 판단한 적절한 통계치나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길 바람.(스페인)
-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었으나 subsidy 관련하여 농업부문은 복잡하며, 환경측면의 subsidy 성격도 고려되어야 함, 화석연료 보조 관련하여 농업수산분야만 언급되어 있는데 보조금 성격여부자체가 검토되어야 함/논란) 바이오 연료 부문 서술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물 다양성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음.(프랑스)
- 종합 보고서에서 생태다양성(biodiversity)과 토지 이용 변화 부문이 많이 누락된 것 같음. 종합 보고서 paragraph 34에 “바이오 연료 정책이 2005에서 2008년 사이에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개발도상국에 식량난을 초래했다고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타 수요 부문 원인과 시장 왜곡 등 다른 요인도 포함되어 있음.(미국)
- 종합보고서와 농업 부문 보고서에 농민들의 Green Growth 관련 활동 등 human factor(예를 들어 advisory service)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탈리아)
- 종합 보고서에서 보조금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implicit 보조금에 대한 언급도 필요함.Biotechnology도 녹색 성장의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도 종합 보고서에는 언급이 미비함.(호주)
- Green Growth와 지속가능한 발전간의 연계가 적절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 식품 농업 분야 보고서에서 제안 및 수정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paragraph 7, 103-111에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무역 제한이나 시장규제를 철폐하여야한다고 기술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함. 문단 7의 세 번째 단락의 재산권 표현내용과 관련하여 “농업에서 공동체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연구논문 결과를 설명함.(일본)

- 보고서에 국제 협력에 관해 주로 자유 무역에 기반을 둔 해법을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스페인)

- 무역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프랑스)

- 농업 분야에서 자유 무역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브라질)

-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의 제거에는 동의함. 하지만, 농업 보조금의 경우 경우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일본, 프랑스, 스페인, 호주)

-지난 보고서보다 많이 보완되었지만 식품 사슬과 지중해식 식단 (Mediterranean diet) 등의 수요 부문(demand side)을 추가 시켜주길 바람.(스페인, 스위스)

- 자연재해나 정책변화에 의한 리스크분야, 이노베이션분야를 보완해야 함. 농업 부문은 구조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고서에 위험에 관한 언급이 없음(스페인)

- 폐기물 관리, 바이오 기술(특히 형질변환 바이오 기술), 생태다양성과 집약농업(intensive agriculture)에 대한 언급 필요함. 또한 시장 수단 (market-instrument)도 중요하지만 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도 동시에 언급할 필요가 있음.(프랑스)

- 기술 이전 위원회(Technology transfer advisory committee)는 반드시 강조되

어야 함. 시장기능 작동원활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농업의 에코시스템 서비스 측면도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함.(포르투갈)

- 개도국 분야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식량안보와 빈곤경감이슈가 중요하며 수산 분야(Fisheries)는 개발도상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보고서에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아르헨티나)

(우리나라 향후 검토 사항)

- 농업정책적 관점에서 문단7의 제2 및 제3단락의 표현내용에 대해 충실한 문안 검토가 요구됨.
-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의 발언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공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함.
- 농업분야 녹색성장 지표로서 일본이 제안한 생태생산성에 대해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여 일본 등과 공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라. 지표(Indicators) :

- 현재 제시된 2개 표제지표가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현행 표제지표는 녹색성장 관련 일부 이슈만을 대표하는 것임)
- 지난번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표제지표를 이용한 복합지표(=지수)'의 개발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
- 공공 인식 관련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표제지표에 포함시켜야 함
- 현행 표제지표는 '압력지표'(pressure indicators)에 해당하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성과나 진전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표제지표는 모든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한 결과임
- 대부분의 지표들은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지표 값이나 해석방식이 상의한 문제가 있음
- ‘영양분 발란스’ 지표는 토양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공급시스템의 효율성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 ‘영양분 발란스’ 지표에서 고려하는 질소나 인 사용량을 지구적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움

(생산 및 소비 기반 CO2 집약도의 활용성)

- OECD 회원국의 경우, 생산기반집약도는 탈동조화가 관찰되지만 소비기반집약도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음
- 생산기반집약도에 비해 소비기반집약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온실가스의 측면에서 보면 누가 소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함
- 소비 기반 CO2 배출집약도 지표는 이용 가능한 자료/통계의 질이 낮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기반집약도를 소비기반집약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배분과 직간접 배출량 이슈가 등장함
- CO2배출집약도 자체가 적절한 녹색성장지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음. 생산이나 소비에 기반한 CO2배출집약도와 같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보다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가 녹색성장 측면에서 더 적절한 지

표라고 할 수 있음

- 온실가스 이외에 일반 환경 관련 지표가 녹색성장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생물다양성 지표)

- 환경성과보고서에 포함될 '일반적인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 중.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가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

- 생물다양성 지표는 'OECD 핵심지표(core indicators) 및 주요지표(key indicators)'에 포함될 것이며, 환경성과보고서, 환경전망 및 녹색성장지표 등에서도 활용될 것임

- 국가별 생물다양성 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지표 선정

- 국가별로 개발된 지표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CBD-BIP와 SEBI 2010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표도 함께 고려할 것임

- 지표체계는 PSR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요인을 구분·분류할 계획임

-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에 있어서 자료의 갭이 있으며, 자료의 질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국가별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OECD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지표 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의 질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자원효율성 지표)

- 자원생산성이나 자원효율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표제지표에 포함시켜야 함.
측정방식이나 측정가능성에 논란이 있음

- 자본이나 노동생산성과 함께 ‘자원생산성’이 중요한 지표임

- 녹색성장에서는 소비(분배)보다는 생산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지표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녹색성장지표체계)

- 녹색성장지표에 “성장”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고용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성장’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음

- 현행 녹색성장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차별성이 없음

-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 범위 등과 상응하여야 함

-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하기 어려움

- 기존의 성장 측정지표와 환경 측정지표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함 단순한 환경 측정지표는 녹색성장지표로 볼 수 없음 이번에 발표된 녹색성장지표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개발(Development) :

- 개발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서 성장과 함께 분배 측면을 함께 봐야 함. 개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이슈

- 개도국은 대단히 다양한 배경 및 상황을 가지고 있음. 다양한 조합의 정책 및 도구가 필요
- 정치적 안정성, 기본 인프라, 갖고 있는 capacity, 부존 자원 등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하며, 녹색성장을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기회로 인식할 것을 권고
- ‘개발을 녹색성장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및 개도국에 tip을 줄 수 있는 전략
- 녹색성장전략이 녹색성장 뿐 아니라 MDG 달성에도 기여해야 함.

○ 세 명의 lead discussants에 의한 발표

(Zaheer Fakir , South Africa)

- 개도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국가들이며, 녹색성장은 개도국이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님.
- 따라서, GG가 좋은 것이면 애쓰지 않아도 잘 팔릴 것이나, 현재 대부분이 개도국은 여전히 개발과 환경보전의 갈등 관계에 직면해 있음.

(Lorenze Santucci, UNESCAP)

- GG는 SD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며,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이윤 및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봐야 함.
- GG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나 개도국은 GG를 추구하기 위한 자원 부족. GG는 기존의 개발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 이슈를 다루기 위한 보완적인 전략

- 보조금 제거는 빈곤층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함. MDG 내에서도 빈곤 퇴치와 환경보전이라는 상호 갈등적인 요소 공존
- 다음 요소가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함: 정부의 역할 (GG는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해야 함);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적정 가격의 도입; 생활 및 소비 패턴의 변화

(Ishak Kasim Syurkani, Indonesia)

- 보고서 제 2장 및 제 5장이 더 중요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성장 필요성 매우 높음
- 이론적 접근보다는 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며 빈곤층을 고려하는 inclusion policy 필요

○ 각국에 의해 제기된 주요 논점

- GG는 pro-poor growth가 되어야 하며(독일), 성공 사례가 빨리 필요함. (미국)
- 지속가능성은 지역적, 국가적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이며 빈곤 퇴치는 핵심이 되는 이슈임.
- 보고서가 지나치게 OECD 회원국 관점에서 작성 되었음. GG가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 법이듯이 보고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례 및 견해가 동시에 반영되는 균형잡힌 보고서가 되어야 함. (네덜란드, 한국)
- “개발” 문제를 별도의 챕터에서 다루어야 함.
- 기술이전이 개도국 GG를 위해 중요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하고, 기술이전

논의시 최첨단 기술 뿐 아니라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 기술이전과 함께 유지, 보수를 위해 능력형성 활동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전 필요. 기술이전 및 능력형성 활동을 위해 개발원조자금을 더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한국)

○ 최종보고서를 위한 제안

- 개도국 사례 및 시각이 반영 될 필요가 있고, GG가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의 가능성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개도국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제안 필요. 즉, 자본 시장의 역할, 에너지 보조금 제거 등은 선진국 위주의 정책

바. 혁신(Innovation) :

(새로운 녹색기술개발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택’이 필요 (smart specialization)

- 예컨대, 어떤 분야에, 얼마나,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필요
- 이는 긴축재정, 예산한계라는 정부가 직면한 현실과 녹색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임계규모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측면이 모두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 기초연구는 여전히 혁신의 중요한 요인

- 그러나 녹색혁신의 체계에 맞게 기초연구의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예컨대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기초연구의 강화,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기초연구의 추진 등)

○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기관 설립과 개방형 혁신

신(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할 필요

-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노력할 필요

(국가들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 중 종합보고서에 반영이 필요한 사례)

- R&D, 혁신, 인력양성 및 교육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창출된 사례
- 초기 녹색혁신단계에서 직면하는 적정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 문제를 극복한 금융지원의 성공사례
-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의 사례와 시사점 (특히 중소기업 대상)
- 녹색기술 실증화 추진 방법 (ex.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 녹색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사례 (아울러 이를 지원하는 정책도구의 mix 등)

(부적절한 기술의 등 경로의존성 극복에 필요한 정책 설계 방안)

- 기술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지적권보호체계와 표준 추진,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 필요
-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적 기술의 도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
- 개방형 혁신 추진, 연구개발의 스핀오프 활성화 필요
- 표준과 규제가 뒷받침된 공공구매 제도의 추진

- 정부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이고, 분명하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혁신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녹색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로 명령과 통제 제도 (예: 규제) 설계 방안)

- 합리적이고도, 잘 작동하도록 짜여진 규제와 표준제도 수립이 필요
 - 예컨대 표준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성능에 기초한 표준도입 필요
 - 규제의 경우 기준이 5~10년 정도 유지되고 변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
- 새로운 규제 실행 시 실행을 위한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어야 함

(국가간 기술이전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공통(지역 or 국가간) R&D, 혁신 어젠다 수립 필요 (ex. EU의 SET Plan: 유럽 연합의 신에너지전략기술계획 등)
- 공통 표준, 공통 지재권보호 시스템 등의 수립이 필요하고, 글로벌 지식시장 (Knowledge market) 활성화 등 지식네트워크 구축 필요

(기업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

- 기술개발 외에도 녹색산업 지속을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
 - 녹색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 (ex. 벤처 활성화, 벤처캐피탈, 클러스터, 산학 협력 연계 등)

- 녹색산업의 기반이 될 Green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 ICT, 지식집약적 서비스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

- 제조업 분야의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지원이 필요

- 생산과정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자원 저소비, 오염물질 저배출을 추진

(향후 synthesis report에서 보완·추가할 사항)

- 녹색혁신을 위한 새로운 R&D 모델 수립 필요

- '예산한계 vs 녹색 투자 확대'라는 모순된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금융지원체계가 필요

- 특히 현재의 긴축재정, 예산한계 등 각국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녹색 R&D에 대한 투자확대의 장애요인

- 따라서 기존의 성장방식과는 다른 녹색성장에 맞는 R&D funding 체계를 수립할 필요 (일례로 보조금 보다는 조세 정책에 초점을 두어 민간으로 부터의 투자를 활성화 하는 체계 수립이 필요)

- R&D 성과의 사업화, 시장 확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 수립 필요

- 녹색혁신은 기존 성장방식과는 다른 성장방식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R&D 성과의 사업화, 시장 확산도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혁신에 적합한 'R&D → 사업화, 상업화 → 시장확산' 연계의 새로운 모델 수립 필요

○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vs 녹색기술 전반에 대한 R&D

- 보고서에서는 특정분야, 특정기술의 선정, 이에 대한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강조
- 그러나 기존 비녹색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혁신적 녹색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로 각 국은 중점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
-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바, 더욱 객관적인 자료, 실제 사례를 보완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

○ 녹색혁신을 추동하는 소비자와 수요의 역할 증진에 대한 고려 필요

- 수요는 초기 단계 기술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의 소비양식, 행동 패턴 역시 녹색혁신의 매우 중요한 요소
- R&D, 규제, 표준 등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수요창출에 있음
- 그러나 보고서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 비기술적 녹색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추가보완 필요

- 녹색혁신은 기술혁신 외에 비즈니스 모델, 근무패턴, 도시계획, 교통체계 변화 등 비기술적 녹색혁신(non-technological innovation)도 요구
- 녹색혁신은 기술혁신 외에도 사회적 혁신(에너지 저소비 사회 등), 소비자 혁신(녹색 소비 패턴으로의 변환) 등도 포괄한다는 의견이 다수

- 보고서에서는 비기술적 녹색혁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비기술적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정책의 역할, 구체적 방안이 부족

○ 기술이전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추가보완 필요

- 보고서에서는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지재권보호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못함

○ 보고서의 내용이 녹색혁신 추진의 행동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녹색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한계와 애로점을 극복한 구체적 성공 사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내용이 더욱 추가되어야 함

3. Plenary 세션(wrap up 및 Closing)

(세션별 요약)

가. Economic Instrument

○ 환경개선과 경제성장 모두를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적 조합은 무엇인가?

- 개별 국가의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시장기반수단(Market based instruments)을 위주로 하되 비시장 수단(Non-market instrument)이 보완적 역할을 할 것임

○ 소비자 행동(consumer behaviour)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층적 정책적 조합(Different layers of policy)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공급측면과 수요측면(Supply side and demand side), 단기와 장기(Immediate

and long term), 세금정책과 소비정책(Tax and spending) 등

나. Job & Skills

- 녹색 일자리 개념 및 녹색성장이 Job Creation 창출 여부
 - 녹색 일자리 개념 정립은 현재까지 매우 어려우며 녹색성장 전환과 고용구조 변화는 시장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전체규모 외에도 산업별 고용변화 등이 혼재하여 있다고 보아야 함
- 녹색성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부정적면이 혼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mix가 필요함

다. 농업 및 식량

- Headline indicator에서 양분수지 지표(nutrient balance indicator)는 농업 부문만 다루고 있어 균형적이지 않고 성장과의 연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반대의견으로 인해 (종합보고서에서) 폐기될 것임. 대신 생태다양성을 고려한 land use change indicator가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의 제거에는 동의함. 하지만, 농업 보조금 문제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함.
- 농업보고서는 분리된 보고서로서 출간하며 신흥개도국 분야, 수요분야, 제도 분야, social 이슈 등을 추가 보완할 예정임

라. 녹색성장지표

○ OECD 녹색성장지표는 회원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녹색성장 측정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자연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신호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 및 자료가 필요

- 현재의 통계 수준으로는 녹색성장에 상응하는 지표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녹색성장전략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표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통계 개발이 필요

○ 녹색성장지표가 녹색성장을 대표하고 관련 정책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자원생산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포제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존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와의 차별적인 녹색성장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환경을 연계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마. 개 발 (Development)

○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가능한 개발 정책 제시 필요

- 보고서가 OECD 회원국 관점에서 작성되어 개도국에 필요한 개발 정책이 부족. 특히, 보조금 삭감 문제는 개도국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 있음

- 기술 이전을 통한 개도국 지원 문제가 개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 있음

- 다만, One size fits all은 없으며 각기 다른상황과 영향요인 들을 보다 고려
- 향후 최종 보고서에는 개도국도 녹색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관련 개발 사례가 제시될 필요 있음
- 글로벌 관점과 이슈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점에서 개도국과 함께 폭넓게 검토 되도록 노력
- Pro poor growth에 많은 관심 표출됨, OECD 협력경험을 잘 표현해야 함

바. 혁신(Innovation)

-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특히 R&D에 대한 정부 투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논의
- 투자확대의 방식(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투자 우선순위 결정(어떤 분야에, 얼마나) 등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필요
- 아울러 기초연구의 결과가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와 사업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글로벌 차원의 녹색혁신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이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개진
- 지재권이 지식확산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지재권보호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 특히 이 점은 혁신적인 녹색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개도국의 입장에서 무

엇보다 중요함이 강조

- 아울러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지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
-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비기술적 녹색혁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비기술적 녹색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
- 사회기반 인프라의 녹색화, 생활방식의 녹색화는 소비자, 사회적 차원에서 녹색혁신을 추동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을 주목해야 함

(Closing)

- Angel Gurria 사무총장은 Closing remarks을 통해 녹색성장은 단순한 구호나 정신이 아닌 (not color, not mind) 이행 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아래메시지를 전달함
- ①녹색성장 진전을 위해서는 구체계획이 필요한데, 각국의 금융, 경제, 통상, 환경 및 human resource 부처 등이 함께 정책 mix를 제시하여야 함. 특히 고용 시장 관련 정책 제시가 향후 중요시 될 것임 ②경제 발전(progress) 측정시 natural assets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된 지표가 필요함. ③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이 가장 중요함. 혁신은 다른 정책을 확산(spin off)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 Tool이고, 동력(driver)임. ④녹색성장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⑤ 녹색성장은 비용을 과다히 촉발시키는 사치스러운 정책이 아님.
- 아울러, Gurria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은 모험이자 기회인데, 기존 정책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poor country도 함께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한편, 동 총장은 '한국 대통령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 부처를 push하

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 OECD 각료 이사회 계기 한국 대통령 또는 총리 참석 가능성을 언급함.